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2. 27.(수)
[2023년 법무부 정책 돋보기]

각 부처·기관별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12. 27.(수)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 구축(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의 원스톱 허브 역할 수행)
 -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원스톱 지원을 총괄('24. 7.)
- ②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24. 7., 향후 전국 확대 추진)
- ③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 각 부처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내용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24. 12.)
- ④ 맞춤형 원스톱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 법무부는 각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원스톱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유형 및 피해자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23. 12.)
- ⑤ 원스톱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실시
 - 법무부가 주관하여 원스톱 지원 전담기관 종사자 및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검찰수사관·검사 등에 대한 통합 교육 실시('24. 상.~)

앞으로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2023년 10월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12. 27.(수) 확정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개요

- ▶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
- ▶ [역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 심의
- ▶ [구성] 위원장 : 법무부장관
위원: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민간위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각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 제도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경제,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64-1]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이번 방안은 '22. 10. 20.부터 관계부처* 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8차례** 회의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수렴하여 마련하였고, 이후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 ①'22. 10. 20. / ②'22. 11. 22. / ③'23. 1. 19. / ④'23. 2. 21. / ⑤'23. 3. 23. / ⑥'23. 6. 9. / ⑦'23. 6. 20. / ⑧'23. 11. 3.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 구축(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의 원스톱 허브 역할 수행)

○ 각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범죄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 수행

* 피해자별로 각 전담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지원과 타 기관·서비스의 안내·연계를 통한 맞춤형 종합지원 및 사례관리 등 실시

< 범죄유형별 전담기관 및 기대효과 >

범죄유형별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센터(성폭력범죄)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학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기타 강력범죄 등)
------------	--

기존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방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의 단편적인 안내·연계 위주 → 중복 안내, 지원공백 문제 및 방문 기관에 따른 지원 편차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전담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안내·연계 및 사례관리 실시 →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관리 실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원스톱 전담인력 배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타 기관에서 원스톱 지원이 어려운 피해자 등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 역할 수행
- (원스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사례회의 개최) 사건초기 다양한 피해자 지원 기관 서비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원스톱 전담기관 및 경찰’이 주관하여 유관기관과의 사례회의를 개최
-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개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부족한 지원을 보충적으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송치 후 사건 처리 전 ‘검사’가 주관하여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회의를 개최

2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소통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다 나은 솔루션 제공을 위한 상시적 협업 추진
 - * ('23. 11. 15.) 법무부-서울시 MOU 체결 → ('24. 7.) 서울시에 제1호 센터 개소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점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 방문 → 시간비용 증가, 번거로움 ▶ 한 기관에서 한가지 유형의 지원 ▶ 지원기관간 상시적 협의·진행상황 공유 등 어려움 * 여러 개별병원 따로 예약 방문과 유사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 방문 → 시간비용 감소, 편리함 ▶ 한 센터에서 종합적 지원 ▶ 지원기관간 상시적 대면 협의연계를 통한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가능 * 종합병원에서 연계치료와 유사
-----------	---	---	-----------	---

3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 범죄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쉽게 확인할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24. 12.)
 -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안내하면서, 피해자가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유형별·형사절차별·기관별로 유형화하여 정보 제공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별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한 자원제도의 내용을 각각 확인 필요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 포털을 통해 전체 피해자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의 종합적인 검색·확인 가능
-----------	---	---	-----------	---

④ 맞춤형 원스톱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 각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범죄유형 및 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23. 12.)

*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외국인 피해자 범죄 등

- 매뉴얼 사용자의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고, 법령·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매년 업데이트 시행 예정

기존	▶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제도를 나열한 안내서 배포	→	개선	▶ 범죄유형·피해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제도를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구조화된 매뉴얼 제공
-----------	------------------------------	---	-----------	--

⑤ 원스톱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실시

-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무부가 주관하여 원스톱 지원 전담기관 및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검찰수사관·검사 등에 대한 통합 교육 실시('24.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

- 현장 종사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매년 교육과정·내용 업데이트 실시

* '24. 상반기부터 연간 2회씩 매년 실시 예정

기존	▶ 각 기관별로 별도 교육 실시 → 피해자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타기관 제도에 대한 교육 부족	→	개선	▶ 각 부처별·기관별 전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교육 ▶ 통합교육 과정을 통해 각 기관 종사자간 네트워크 강화
-----------	---	---	-----------	---

앞으로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2023년 10월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단장 : 법무부 정책기획단장)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별첨 1.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담당 부서 <총괄>	법무부 인권구조과	책임자	과 장	강정영 (02-2110-3641)
		담당자	서기관	반준성 (02-2110-3743)
<공동>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책임자	단 장	정수진 (02-2110-3631)
		담당자	사무관	윤정희 (02-2110-3936)
<공동>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문선 (02-2100-6381)
		담당자	서기관	양현순 (02-2100-6306)
<공동>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조우경 (044-202-3380)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044-202-3381)
<공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봉근 (044-202-3280)
		담당자	사무관	박종한 (044-202-3452)
<공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10)
		담당자	서기관	최기전 (044-202-3301)
<공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책임자	과 장	김도형 (044-203-6972)
		담당자	연구관	김도균 (044-203-6983)
<공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2-2110-15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호 (02-2110-1549)
<공동>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권성희 (02-3480-2940)
		담당자	사무관	임종훈 (02-3480-2966)
<공동>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나영민 (02-3150-0135)
		담당자	경 정	심보영 (02-3150-0210)
<공동>	서울특별시청 양성평등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이성은 (02-2133-5005)
		담당자	사무관	오부자 (02-2133-5028)

